

일본정부 온난화 대책 일보후퇴

산업계의 반발로 추진 난항

일본정부, 지구온난화대책 주요 3개 항목에 대한 기본방침 발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16)이 종료된 직후인 작년 12월 28일, 현 여당인 민주당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각료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주요 세 가지 항목(지구온난화 대책 조세제도, 재생에너지 전량 고정가격 매수제도, 국내 배출량 거래 제도)에 대한 기본적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2009년에 발표한 정권 공약 내용과 급변 기본방침을 비교해 보면 국내 배출량거래제도 도입 검토를 사실상 동결하고, 주요 대책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日 민주당 지구온난화 대책 노선변경

온난화대책	공 약	결 론
지구온난화 대책세금	도입 검토	2011년 10월 도입 결정
신재생에너지 전량매수제도	조기 도입	2012년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법안 제출
배출량 거래제도	창설	도입 유보

지구온난화 대책 조세제도 2011년 10월 도입 확정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는 2011년 10월에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조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제도 시행을 위해 일본정부는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과세의 특례’를 마련하고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1kl 당 760엔, 탄화수소는 1t 당 780엔, 석탄은 1t 당 670엔의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제도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면세와 환급조치를 마련하고 연료의 생산, 유통비용의 삭감과 물류, 교통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세율이 낮고(1l 당 1엔 미만) 화석연료 소비 억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2009년에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에 발표한 ‘202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25% 삭감’ 목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30% 삭감’이라는 목표만 제시되고 있다. 1990년 대비 25% 삭감 목표는 하토야마 당시 총리가 스스로 제안한 것이었으나 에너지기본계획은 산업계와 밀접한 관련조직인 경제산업성이 주도해서 책정된 장기계획이며,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자력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구온난화 대책 조세제도가 원자력 관련 투자에 치우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수제도는 도입 2년 연기

일본 민주당 집권 시 2010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공약을 내세웠던 재생에너지 전량 고정 가격 매수제도는 2012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제도 도입”은 어디까지나 목표이며 “제도 도입 후에도 유연하게 재검토 한다”고 해서 연기

나 조기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배출량 거래제도는 실시가능성 낮아져

국내 배출량 거래제도에 대해서는 산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제도설계나 조정이 어렵고 실질적인 삭감효과에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침 발표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되고 사실상 동결이 결정되어, 향후 논의 방향이 더욱 후퇴할 전망이다.

COP16에서 세계로부터 비난 받은 일본

멕시코에서 개최된 COP16에서 개막 첫날부터 일본은 주목을 받았다. 첫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일본 측 담당자가 “일본은 현행대로의 교토 의정서 연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이다.

현행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서만 온실효과 가스 삭감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 가맹국인 한국이나 멕시코 등에 대해서는 삭감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계 1위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국이 된 중국이나 배출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인도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카테고리에 포함되고 있다. 배출량 제2위의 미국은 교토 의정서조차 비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토 의정서에 있어서 삭감 의무가 있는 국가들의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27%에 지나지 않으며 “현행 틀의 고정화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었다. 일본은 각국으로부터 COP16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NGO단체로부터 “화석상(化石賞)”을 수상했다. 화석상은 완고한 자세로 협상을 후퇴시킨 국가에 주어지는 상이다.

일본은 끝까지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여 결국 COP16에서는 교토 의정서 연장이 결정되지 않았다. 일본정부가 “교토 의정서 연장 절대 반대”에 그토록 고집을 부린 이유에는 일본 산업계의 강력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민주당 지지도 하락으로 산업계에 정책 주도권 빼앗겨

석유연맹, 시멘트협회, 전기사업연합회, 전자정보기술 산업협회, 화학공업협회, 가스협회, 자동차공업회, 제지연합회, 철강연맹의 9개 단체는 “교토 의정서 연장은 지극히 불공평하고 실효성 없으며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것”, “일본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교토 의정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 산업계는 COP16 폐막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COP16에 대한 긴급제안”을 발표했다.

2009년에 처음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주요지원 단체는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경영자 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경단련은 1955년 이후 줄곧 여당이었던 자유민주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경제정책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 존재감이 작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외교문제 대응 등으로 실패를 거듭해서 지지율이 급락, 정권 기반 유지를 위해 산업계를 배려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COP16에 있어서 강경 자세를 보인 것, 폐막 후 발표한 기본방침 등은 완전히 산업계의 의도를 따른 것이다. 